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민생 행보'로 전열 정비

천막 농성·1인 시위·장의 집회 이재명, 계파간 단합·결속 나서 이-김동연, 수원 전통시장 동행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등 협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따른 '사법리스크' 파장을 수습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대외 공세와 함께 수권 정당 면모를 부각하려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에서는 야간 천막농성, 광화문 등에서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병행하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23일에는 광화문에서 제4차 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연 뒤, 오후 6시부터는 시민단체 '거부권비상행동'이 주최하는 본행사에 참여한다.

장의 집회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방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을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과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으로 열기로 했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당원들에게 파란색 계열의 색상 착용 자제령도 내렸다.

이와 관련,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혹시

라도 당적을 갖고 계시지 않은 많은 국민들에게 집회에 참여하기 꺼려지는 요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대통령실 항의 방문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녹취 파일을 계속 공개하고 있다.

특검 관철을 목표로 대외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이를 고리 삼아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내부 전열 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생 행보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내 대권주자 중 한 명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 전통시장을 찾았다.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로 당이 어수선해지자, 계파간 단합과 결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당내 분열을 차단하려는 선제적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번 동행은 이 대표 측이 김 지사 측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지역화폐 활성화 등의 정책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

시장·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지역화폐페라도 충분히 발행해서 동네 매출이 오르고 골목 경제가 활성화되면 동네에 온기가 돌 것"이라며 자신의 브랜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가 소비진작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국고를 투입해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전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0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하는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대표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들은 뒤 '폐업 소상공인의 빚 상환 유예·탕감' 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정치권에서 이 대표의 대항마로 '신 3김' (김 지사·김부겸 전 총리·김경수 전 경남지사)을 꼽는데 대해, "민생이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 '신 3김'이나 '플랜B'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김건희 불기소' 검사 탄핵안 28일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정결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일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련한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가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정숙 여사 소환 관련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 김영진 위원장과 전진숙, 박균택 의원 등이 2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정숙 여사 소환 통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

민주 광주시당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집중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23일 오후 1시 광주 내 8개 지역위원회 천막당사에서 진행된다. 지역위원장 및 핵심당원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실태와 명태군 게이트 등 국기문란 행위를 알리는 피켓시위와 가두 홍보를 진행한다.

장소는 구체적으로 △동남구갑 빅스포

뒤 푸른길 공원 광장 △동남구를 5·18민주광장 △서구갑 세정아울렛 앞 △서구를 풍암동 하나은행 앞 △북구갑 우산근린공원 △북구를 전남대 후문 △광산구갑 KTX송정역 광장 △광산구를 쌍암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당은 국정농단 특검 관철을 위해 보다 많은 광주시민들의 서명운동 동참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성현 기자

문금주, 쌀값 정상화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21일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결의안에서 쌀 가격의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해 명확한 쌀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추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또 사전적 수급 조절과 사후적 피해보전 대책, 식량 자급을 향상, 이상 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방지,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을 담아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현재 산지 쌀값은 18만2872원(80kg)으로, 전년동기대비 8.2%(1만6408원) 하락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서울=김선욱 기자

진성준 "양당 정책위의장 쌀값 안정 긴급회동 제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민의힘을 향해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올해 쌀 수확기의 절반이 지났는데 산지 쌀값이 정말 심상치 않다"며 "지난달 정부의 20만 톤 시장격리 발표와 통계청의 생산

량 감소 발표에도 아직 산지에서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 간사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즉각 만나서 쌀값의 목표값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 자부담 완화해야"

최근 10년 자연재해 피해 3193억 나광국 "전남, 지원예산 늘려야"

전남지역 자연재해 피해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심각한데 비해 풍수해보험 온실·상가 가입률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자부담 완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나광국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사진)은 지난 20일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남에서 태풍, 홍수,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총 31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북, 강원, 경기, 충북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피해액이다.

이에 반해 각종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기준 주택 가입률은 46.4%로 비교적 높았으나, 온실은 3.7%, 상가·공장 가입률은 13.2%에 불과했다.

이 중 온실과 상가 가입률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11위, 상가는 16위에 그치는 등 매우 낮았다.

나 의원은 "온실과 상가·공장이 농민과

소상공인의 생활 터전임에도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30%에 달하는 자부담 비율 때문"이라며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된 풍수해보험 지원 도비 3억 원을 대폭 증액해 이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재해 피해는 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농민과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드는 데도 민안전실에서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김신남 전남도도민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타 시도 사례 등 적절한 자부담 비율을 검토해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오지현 기자

김나운 시의원 "광주 장애인 직장운동부 처우 개선"

광주시 소속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나운(사진) 광주시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광주시 문화체육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지만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에게 운영 조례와 지침이 별도로 적용돼 차별적 요소가 발생한다"며 "장애인 선수는 선수 등



급 기준도 훨씬 까다로워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포상금은 비장애인에 비해 국제대회 기준으로 절반 이하 수준"이라며 "장애인 선수들은 포상금과 연봉뿐 아니라 계약금 및 각종 수당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 홈페이지조차 비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만 소개돼 있고,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찾아볼 수 없다"며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에는 탁구, 양궁, 사격 3개 종목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12명이 등록돼 있다.

정성현 기자